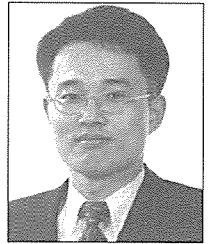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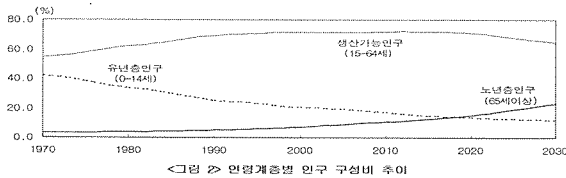
농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안용택 과장
농림부 농촌사회과

1. 서론

우리나라의 노년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에 300만 명대에 진입하고, 5년 만에 400만 명대로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중이 9.3%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빈곤, 소외, 질병, 세대간 부담·수급의 불균형의 확대,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화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촌지역(읍·면부)은 이미 2000년에 65세 인구 비중이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6%로서 조만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 (2005). 2005 고령자통계

최근 5년간의 읍·면지역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인구는 6.8%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나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이 2002년 기준 88개 군 중 23개

군(27%), 2003년에는 30개군(35%), 2004년 35개군(41%), 2005년 58개군(63.6%)으로 전년도보다 22.6%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고령화 진행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이 63.6%, 고령사회에 진입한 군이 30.8%,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군이 5.6%로 조사되었다.

<표 1> 동·읍·면 지역 인구구조

구분	2000년			2005년			증감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동지역	읍면지역
전국	45,965	36,642	9,343	47,041	38,338	8,704	1,056	1,695	-63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14세	9,639	7,897	1,742	8,986	7,491	1,495	-653	-406	-246
(구성비)	21.0	21.6	18.6	19.1	19.5	17.2	-1.9	-2.0	-1.5
15-64세	32,973	26,743	6,230	33,690	28,100	5,590	717	1,358	-640
(구성비)	71.7	73.0	66.7	71.6	73.3	64.2	-0.1	0.3	-2.5
65세이상	3,372	2,001	1,370	4,365	2,747	1,618	993	745	248
(구성비)	7.3	5.5	14.7	9.3	7.2	18.6	1.9	1.7	3.9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표 2> 군단위 노인인구 비중 현황

행정구역	군수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 14%≤20%	고령화사회 7%≤14%	<7%	비고
탁발시, 광역시의 군	5 (100%)	2 (40.0%)	-	3 (60.0%)	-	
도단위의 군	83 (100%)	56 (67.5%)	25 (30.1%)	2 (2.4%)	-	
계	88 (100%)	58 (63.6%)	25 (30.8%)	5 (5.6%)	-	

주: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재정리

오늘날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가족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촌의 고령화된 노인을 돌보는 일을 가족적 차원에서 보다 사회적인 복지 차원에서 준비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촌지역의 복지 수요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사회복지적 대응은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노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적서비스의 공급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농촌 노인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무엇보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공간적 범위가 넓고, 인구밀도가 낮음으로써, 투자대비 효율을 생각하는 정책 추진의 관점에서 농촌노인의 문제는 도시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 거주 노인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정책이 아직 미흡하며 이러한 사안의 현실적 적용 및 구체적 실행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다.

2. 농촌 노인복지 증진대책 추진

가.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농어촌지역 도입시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나, 200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06년부터 표준소득월액 13등급(48만원/월)을 기준으로 동 등급이하(1등급~13등급)인 농어업인에게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하고, 13등급을 초과(14등급~45등급)한 농어업인에게는 기준등급인 13등급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1인당 연간보험료 지원액은 연간 119천원에서 259천원까지 이다.

나. 고령취약농가 인력지원

2006년부터 65세 이상 고령단독 농가?편조부(할아버지와 18세 이하 손자녀), 편조모(할머니와 18세 이하 손자녀)농가 중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에 영농도우미·자원봉사자 등이 주1회 방문하여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정비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보호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 지역 내에 건강·장수마을 2006년까지 3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3> 건강장수마을 시도별 조성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사업량	'06신규사업	200	1	1	3	-	1
	'06계속사업	100	1	2	2	1	1
	소계	300	2	3	5	1	2
사업비	합계	7,500	50	75	125	25	50
구분	경기	45	20	27	13	20	15
	강원	12	5	11	12	16	13
	충북	0	0	0	0	0	0
	충남	8	11	13	16	13	11
사업비	625	1,425	625	950	625	900	700
경북	11	0	0	0	0	0	0
경남	11	0	0	0	0	0	0
제주	6	4	4	4	4	4	4
사업비	250	250	250	250	250	250	250

라. 노인 수발보험 수발서비스 도입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현재 전인구의 9.3%(436만명)로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간병·수발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수발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현재 (가칭)노인수발보험법률이 2006년 2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어 금년 연말까지 동 법률안을 제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금년내 노인수발보험법이 제정되면,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본격 실시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 시·군·구에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제1차 시범사업을, 그리고 2006년 4월에서 2007년 7월까지 2차 시범사업으로 8개 시·군·구(부산북구·광주남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북제주군)에서 실시 중에 있다.

<표 4> 수발급여 종류

종류	내용	운영기관
재가수발급여	· 가정수발 · 목욕수발 · 간호수발 · 주·야간보호수발 · 단기보호수발	· 수발기관 · 방문간호기관 · 주·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시설수발급여	· 시설 입소 수발	· 노인요양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특별연금급여	· 가족수발비 · 특례수발비 · 요양병원수발비	

마. 농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 요보호 욕구해소를 위해 가정 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을 해소시키고 지역적 편재 해소를 위해 농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2006년까지 전국에 90개소를 설치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며 공격 노년요양보장제도의 농촌 지역 공공부문 기본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표 5>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수, 천명)

구분	시설				재가
	계	무료	실비	유료	
시설 수	543	288	128	127	848
입소정원	30	21	5	4	40

바. 경영이양 직불제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10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72세의 고령농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소유농지를 완전 탈농 조건으로, 한국농촌공사 또는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2005년 9월 시행)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범정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노인과 그 가족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활발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등이 주요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3. 향후 정책방향

농촌 노인복지정책은 지금까지 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년 6월 시행)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재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4년 8월 농림부에 농촌사회과가 신설되어 농촌복지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 노인복지의 종합적인 조정자(coordinator)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농림부 및 관계부처의 사업을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농촌 또는 농촌노인복지정책이 입안되거나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에는 농촌과 농촌노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WTO/DDA 및 FTA 협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2006년도 농어촌복지 부문 투자내역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보합)	합계
	농특세	관력	기타회계	기금등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	136,856	-	-	-	-	-	136,856
농어민국민연금보험료지원	67,270	-	-	-	-	-	67,270
농업인재육성제	18,256	-	-	-	-	-	18,256
어선양재해보상보험	-	-	18,000	-	-	-	18,000
기초생활보장제도	221,430	-	2,319,530	-	2,319,530	733,156	3,662,586
합계	221,430	0	18,000	0	233,430	0	18,256

<농어촌보건·의료기반 확충>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보합)	합계
	농특세	관력	기타회계	기금등			
농산어촌지역 응급 의료 인요구 확충	3,667	-	-	770	4,437	-	4,437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	57,292	-	-	-	-	28,646	85,938
지역거점 공공 의료기관 육성	-	-	-	31,904	31,904	27,097	58,011
농업인 건강관리심사실 및 장비확충	3,987	-	-	-	-	3,913	7,900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	400	-	400	-	400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300	-	300	-	300
안전영농구역(Safe Farm Zone) 조성 시범사업	540	-	-	-	-	540	1,080
합계	66,486	0	700	32,674	37,041	60,196	159,066

<농산어촌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보합)	합계
	농특세	관력	일반회계	기금등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	2,750	-	-	-	2,750	2,750	5,500
노안영시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	-	100	-	100	-	100
농촌장수마을조성	7,600	-	-	-	7,600	7,500	15,100
경영이양 직불제	17,491	-	-	-	-	-	17,491
합계	27,841	0	100	0	10,450	10,250	38,191